

전남도-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갈등 일단락

총식품비 '6대 4 분담' 최종 합의 2199개교 21만9천명 1651억 규모 비율유지·지원방식 개선 추가 논의 의뢰회 "안정 운영 위해 소통·협력"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분담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연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극적인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열린 '무상급식 예산안 관련 예결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 및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으로 하면 교육청이 990억6000만원, 전남도 및 시·군이 660억4000만 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등 2199개교 21만9000명으로,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사업비는 16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6대 4 비율 유지 △끼니 당 200원 우수 식재료 현금 지원 방식 개선 등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관련 논의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도가 50대 50인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하

는 바람에 교육청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가 맞지만 지자체가 100%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를 더하면 지자체 부담률은 47%에 이르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나광국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

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해 중재에 노력해 준 예결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또한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1551억 투입

69개 일자리...3만6348명에 제공 공익 활동·공동체사업단 등 참여

광주시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이날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에 내년엔 3만63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9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2만6502명 △보육시설보조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5923명 △매장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2754명 △민간업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모집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이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고,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어르신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와 달린 사항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신청 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점이 신설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 장기요양보험의 인지기능등급자라도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참여 기준을 대폭 넓혔다.

희망자는 2일부터 1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북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활동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받고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9만 원을 지급받으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근무시간에 76만1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저금통으로 온정 나눔하는 어린이들

광주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창조어린이집 원생들이 2일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1년간 모은 우유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모금액은 지역 돌봄이웃들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나건호 기자

채은지 시의원 "광주소방 합동청사 개청 지연 우려"

광주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을 아우르는 합동청사 개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채은지(사진) 광주시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서부소방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안전 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상태이며 비좁은 시청사에 자리한 소방본부의 인력과



장비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합동청사 부지매입 필요액은 47억원 규모였지만 사유지 협의 지연 등으로 33억만 편성됐다"며 "당초 계획상인 2028년 통합청사 개청이 심히 우려된다. 합동청사 신속·이전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절차가 다소 늦어진 면이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필요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여행

2024/12/02~2025/03/26

1인 상품가 999,000원부터~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